김포 FC 횡령 사건 – "해외였다면 승점 삭감?" K리그의 대응과 직원·임원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유럽에서는 구단의 재정 부정이나 파산이 드러나 징계 절차를 거쳐 승점 삭감이나 강등까지 이어진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그럼 K리그는 어떨까요?

사건의 개요

2026년 7월, 프로축구단 김포 FC의 직원이 약 4년 동안 최소 58억 원에서 최대 83억 원에 달하는 구단 자금을 횡령하고, 계좌 잔액을 조작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은 이 돈으로 외제차와 해외 부동산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 운영 자금이 사실상 바닥나면서 선수 계약금과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외라면 어떻게 됐을까?

축구 팬이라면 한 번쯤 떠올릴 사례들이 있습니다.

1. 유벤투스: 분식회계로 승점 10점 삭감

이탈리아축구협회(FIGC)는 2023년 1월, 유벤투스가 선수 이적료를 부풀려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낸 이른바 '플러스발렌차(plusvalenza, 이적 차익)' 분식회계를 이유로 승점 15점을 깎았습니다. 이 징계는 4월에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 스포츠법원에서 취소됐지만, 5월에 다시 승점 10점 삭감이 확정됐습니다. 유벤투스는 2위에서 7위로 떨어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쳤습니다.

2. 파르마: 파산 후 4부리그에서 재출발

1990년대 UEFA컵 우승팀 파르마는 2015년 파산했습니다. 새로 세운 구단은 4부리그 격인 세리에 D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재정이 무너지면 리그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3. 레인저스: 청산 후 4 부리그에서 재창단

스코틀랜드 명문 레인저스는 2012 년 세금 문제로 법인이 청산됐습니다. 새 법인이 구단을 넘겨받았지만 1 부리그 복귀는 허용되지 않았고, 4 부리그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4. 볼턴 원더러스: 법정관리로 승점 12 점 삭감

잉글랜드 볼턴은 2019 년 약 120 만 파운드의 세금 체납 끝에 법정관리(administration)에 들어갔고, 잉글리시 풋볼 리그(EFL) 규정에 따라 다음 시즌을 승점 -12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경기를 거부해 리그 경기가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사례는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승점 삭감이나 하부리그행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모두 수사, 징계 절차나 법정관리를 거쳐 몇 달에서 길게는 1 년 넘게 걸린 결과였고, 직원 한 명의 횡령으로 구단이 피해를 본 김포 FC 와는 사안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럼 K 리그는 왜 다른가

한국프로축구연맹도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하고, 재정건전성은 그 핵심 요건입니다. 제도상으로는 재정 문제가 계속되면 제재금, 승점 삭감, 나아가 라이선스 불허(리그 참가 자격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맹이 택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김포시의 요청을 받고 연맹이 회계뿐 아니라 선수단과 법률 문제까지 직접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연맹 지원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단이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지켰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있어서, 징계 여부는 아직 판단 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포 FC 가 갑자기 무너지면 K 리그 2 운영 자체가 흔들립니다. 사건의 성격도 다릅니다. 유벤투스처럼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직원 한 명이 구단 몰래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연맹으로서는 사실상 피해자인 구단에 징계부터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구단이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4 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가 사실상 없었다는 뜻입니다. 연맹이 지금 정상화를 돕더라도 재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라이선스 심사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도 급합니다. 급여가 계속 밀리면 선수는 구단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자체가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주전들이 빠져나가면 시즌 운영이 흔들립니다. 행정적인 징계로 강등되기 전에, 성적 때문에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범인은 어떻게 처벌받나

축구 팬 입장에서 하나 더 궁금한 점, 이 일을 저지른 직원은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이득액이 50 억 원을 넘으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 356 조)에 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 3 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작량감경(정상을 참작한 감경, 형법 제 53 조)을 받으면 법정형을 2 분의 1 까지 줄일 수 있고, 감경 후 선고형이 3 년 이하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4 년 동안 최소 58 억 원 이상을 빼돌리고 외제차와 해외 부동산까지 산 이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 잔액을 꾸미려고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 231 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 234 조)에도 해당합니다. 이 죄들이 함께 성립하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외제차와 해외 부동산은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압류, 추징)로 되찾게 됩니다. 김포 FC 가 얼마나 돌려받느냐가 구단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독하지 못한 대표와 임원은 책임이 없나

돈을 빼돌린 사람은 직원이지만, 팬들이 묻는 것은 결국 "그동안 위에서는 뭘 했느냐"입니다.

먼저 형사책임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직원과 짜고 범행했거나 범행을 알면서 도운 사정이 드러나야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원 책임의 중심은 민사입니다. 김포 FC 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김포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라서,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민법 제 61 조),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에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민법 제 65 조).

핵심은 '감시의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모든 직원의 업무를 감시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해 회사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실제로 작동하게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 다 68636 판결). 이후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이사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 다 279347 판결). 둘 다 주식회사 사건이지만, 재단법인 이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납 담당 직원이 "공금을 단기예금에 넣었다"고 허위 보고했지만, 예금증서와 실제 은행 계좌를 맞춰 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범행이 여러 해 반복됐습니다. 반대로 임원 측은 문서가 정교하게 위조돼 의심할 수 없었다고 다툴 것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임무위반의 경위나 회사의 위험관리체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위 2021 다 279347 판결).

시민구단이라서 적용되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임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제 9 조 제 3 항). 이 의무를 어기면 시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원을 해임하거나, 재단이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 9 조 제 4 항). 이렇게 해임된 사람은 3 년 동안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 10 조 제 1 항 제 4 호).

실제로 홍경호 대표이사는 7월 18일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김포시는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사표를 받아 주면 그걸로 끝나지만, 반려해 두면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김포시는 특별감사에서 대표이사와 단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지겠다고 밝혔고, 시의회에서는 범행이 시작된 시기의 경영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재정 거버넌스의 민낯

4 년 동안 최소 58 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내 프로축구 구단, 특히 지자체가 출자한 시민구단의 재정 감시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사실 직원 한 명이 회사 돈을 대규모로 빼돌리는 일은 한국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2022 년 1 월 공시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서는 재무팀장 한 명이 2020 년 11 월부터 약 1 년 동안 15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15 억 원을 자기 증권계좌로 옮겼습니다. 돌려놓은 돈을 빼고도 실제 피해액이 1,880 억 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0%가 넘는 규모였고 주식 거래도 정지됐습니다. 이 직원은 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5 년과 추징금 917 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024 도 1441). 코스닥 상장사와 프로축구 구단, 규모와 업종은 달라도 내부통제가 비어 있으면 직원 한 명에게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재정 사고가 결국 승점 삭감이나 강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연맹이 구단을 돕는 쪽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K 리그가 성숙한 리그로 자리 잡으려면 재정 투명성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에서는 세 갈래의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돈을 빼돌린 직원은 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와 임원은 공범이 아닌 한 형사처벌보다는 민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손해배상·해임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구단은 연맹 징계 여부와 별개로 재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라이선스 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민 변호사와 김진기 변호사가 함께 썼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기업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고, 김진기 변호사는 세움에서 경영권 분쟁과 횡령·배임 관련 민·형사 소송을 맡고 있는 오랜 K 리그 팬입니다. 법무법인 세움은 기업과 단체 내부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형사 대응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내부 자금 사고를 발견하셨거나 임원의 책임 문제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SEUM Law.

이승민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검사)**
Partner
seungmin.lee@seumlaw.com

김진기 변호사
Partner
jingi.kim@seumlaw.com